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

권 울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ykwon@kiep.go.kr, Tel: 3460-1060)
박수경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협력팀 연구원 (skpark@kiep.go.kr, Tel: 3460-1074)

차 례 ● ● ●

1. 여론조사의 개요
2. 여론조사 결과의 항목별 주요 내용
3.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과 주요 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 ODA 관련 기본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62.7%)가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를 공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82.8%로 나타나 높은 수준이나, 새천년 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등 국제적 개발이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도국 지원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 체계적인 개발교육 및 정책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성의견은 89%로 지지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나, 대외원조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원조규모 확대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 개발원조의 효과 측면에서는 79.4%의 응답자가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중점원조지역으로는 아프리카(38.1%)와 동남아(33.8%),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는 복수응답을 통해 보건의료(62.8%), 경제인프라(43.3%), 교육(28.4%) 등으로 나타남.
- ▶ 원조기관에 대한 지지도는 국제기구 중에서는 UN이 가장 높고(92.7%), 국내에서는 NGO로 대표되는 민간단체(68.0%)와 정부기관(64.8%)이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주요 대외원조 정책개선 과제로는(복수응답) 원조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51.6%), 원조사업의 사후관리 (50.2%), 사전조사 및 사전평가 강화(31.9%)로 나타나 향후 대외원조 정책성과 향상을 위해 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 향후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을 파악하고, 국내·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ODA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1. 여론조사의 개요

가. 조사 배경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한 개발원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ODA 정책의 선진화와 국민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원조의 일반 현황과 정책 측면에서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함.
- DAC 회원국 및 신흥공여국들은 정기적으로 개발협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개발원조에 관한 국민의식을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인식도 분석을 통해 대외원조정책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여론조사 항목은 △ 개발협력의 중요성 인식 △ 개발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 △ 개발원조의 효과 평가 △ 개발원조에의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 정부정책 개선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됨(표 1 참고).

표 1. 여론조사 주요 항목 및 조사내용

구분	세부 항목
개발협력의 중요성 인식	개발도상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중요성 인식 정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주된 이유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한 인지 정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시행 인지 정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사실 인지 정도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이유
개발원조의 정책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	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 의견
	대외원조 제공 찬성 이유
	대외원조 제공 반대 이유
	개발원조를 위한 예산규모에 대한 의견
	대외원조규모 확대정책에 대한 의견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표 1. 계속

구분	세부항목
개발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고 있는 측면
	원조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한국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기관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를 보여주는 기관이나 국가
	민간단체의 원조 관련 사업 중 큰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
	원조 이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정부 정책
개발원조에의 참여 및 정보의 접근성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 여부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과 관련한 평소 행동이나 생각
	원조사업과 관련해 관심 있는 정보
정부 정책 개선 과제	대외원조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
대외원조 관련 기본 인식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여부
	한국의 과거 원조경험 인식 여부
	개발도상국 방문 경험 유무
	본인의 원조 기여가능성에 대한 생각

자료: 필자 작성.

■ 본 조사는 선진공여국 및 국내에서 추진된 대외원조 관련 여론조사와 일부 조사항목을 일치시켜 비교분석을 실시함.

- 선진공여국의 경우 EU(2009년, 2010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국제비교를 실시하고, 국내에서 추진된 국정홍보처(2005년), 외교부(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를 통해 국민인식도 변화추이를 분석함.¹⁾

나. 조사방법론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인 남녀 총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1 대인 면접조사를 실시함.

-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검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표본설계는 [표 2]와 같음.

1) European Commission(2009), *Development Aid in Times of Economic Turmoil*; European Commission(2010), *Europeans, Development Aid and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국정홍보처(2005),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외교통상부(2008), 「개발원조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의 방향 연구」(KDS).

표 2. 표본설계(sample design)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유효표본	1,000명
조사방법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대인 면접조사 실시
조사일시	2011년 5월 17일~6월 1일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모집단 층화	16개 시/도별, 성별(남/여),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구분
표본 추출	다단계 층화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본 오차	전체 1,000명 기준 $\pm 3.1\%$ (신뢰수준 95%)
표본 할당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자료처리	AMD Sempron 3400+를 사용하여 SPSS ver.12.0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검증조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전화검증 실시

자료: 필자 작성.

■ 조사대상은 총 1,000명으로, 성별·연령·직업·지역·학력수준·소득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응답자 특성 별로 나타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은 분포를 보임.

- 성별비중은 남녀 비중이 거의 동일하고, 연령별로는 약 19세~60대 이상의 연령을 다섯 그룹으로 나누어 약 20% 정도로 표본 할당함.
-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이 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4개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임.
- 직업별로는 자영업(19.8%), 블루칼라(24.6%), 화이트칼라(26.1%), 전업주부(19.5%), 학생(6.5%) 등으로 구분
-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졸업이 43.5%로 가장 많고, 가구수입별로는 200만~300만 원이 26.9%, 300만~400만 원이 28.0%로 비슷한 규모이며, 나머지 소득구분별로 분포함.

표 3. 응답자 특성표

구 분		사례 수	비중(%)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 자	493	49.3
	여 자	507	50.7
연 령 별	19~29세	189	18.9
	30대	210	21.0
	40대	219	21.9
	50대	184	18.4
	60대 이상	198	19.8
지 역 별	서울/경기/인천/강원	524	52.4
	대전/충북/충남	101	10.1
	광주/전북/전남/ 제주	112	11.2
	대구/경북	104	10.4
	부산/울산/경남	159	15.9
직 업 별	자 영 업	198	19.8
	블루 칼라	246	24.6
	화이트칼라	261	26.1
	전업 주부	195	19.5
	학 생	65	6.5
	무직/기타	35	3.5

표 3. 계속

구 분		사례 수	비중(%)
전 체		1,000	100.0
학 력 별	초등학교 졸업 이하	63	6.3
	중학교 졸업	90	9.0
	고등학교 졸업	387	38.7
	대재/대졸	435	43.5
	대학원 재학 이상	24	2.4
	모름/무응답	1	0.1
가구수입별	100만 원 미만	29	2.9
	100만~200만 원 미만	140	14.0
	200만~300만 원 미만	269	26.9
	300만~400만 원 미만	280	28.0
	400만~500만 원 미만	124	12.4
	500만 원 이상	152	15.2
	모름/무응답	5	0.5

2. 여론조사 결과의 항목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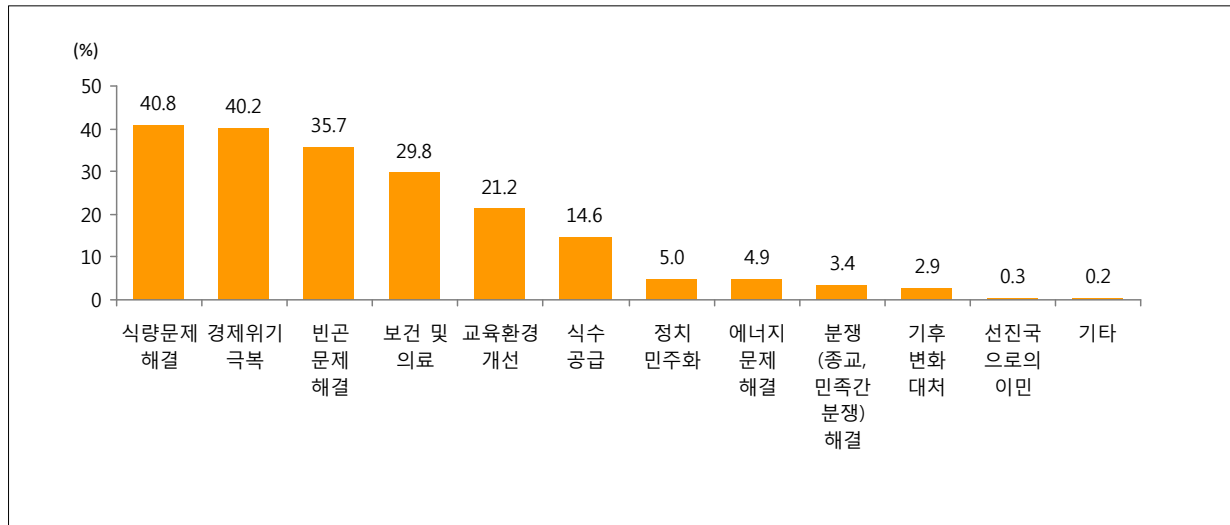
가. 대외원조 관련 기본인식

-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기본적인 대외원조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 여부 △ 한국의 과거 원조경험 인식 여부 △ 개발도상국 방문 경험 유무 △ 본인의 원조 기여가능성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짐.
-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37.3%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62.7%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함.
- 연령별로 19~29세와 60대 이상 응답자의 경우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음 (19~29세 50.3%, 60대 이상 45.5%).
-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과반수여서(57.4%)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활동과 관련한 평소 행동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은 없다’ (64.7%)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아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지지도는 높으나 실제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기부나 후원(20.3%), 자원봉사(2.8%)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23.1%였으며, 개발도상국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각각 30.3%, 9.6%로 더 높게 나타남.
- 한국이 과거에 선진국의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93.0%로 매우 높음.
- 연령별로는 19~29세 응답자의 경우 과거 원조수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14.3%로 나타남.

나. 개발협력의 중요성 인식

- 개발도상국 지원이 '중요하다' 는 응답자는 전체의 90%를 차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로는 '식량문제 해결(40.8%)' 과 '경제위기 극복(40.2%)' 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2개 복수응답).
- EU(2009/2010년)에서 실시된 동일한 설문 의 결과, 빈곤(연도별로 각각 50%, 42%)과 경제위기(35%, 36%)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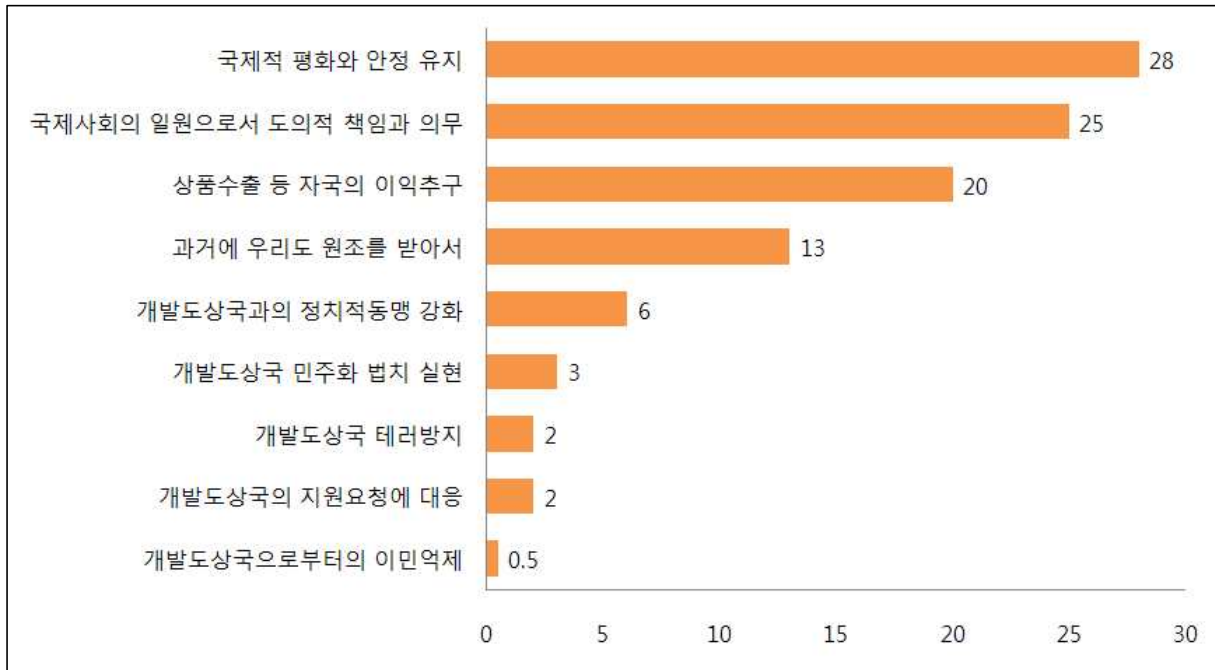
그림 1. 개발도상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



주: 전체 응답자 Base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 (6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의적 책임과 의무' (44.0%), '상품수출 확대 등 자국의 이익추구' (41.8%)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2개 복수응답).
- EU(2009)의 경우 '국제적 평화와 안정유지'(29%), '상품수출 확대 등 자국의 이익추구'(29%),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이민 억제'(22%)가 주요 이유로 제시됨(2개 복수응답).
- 한국이 원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우리도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대외원조 시행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38.7%) 반면, 50대의 인지도는 62.5%로 가장 높아 대외원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냄.
- 그러나 국제적인 주요 개발의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적 개발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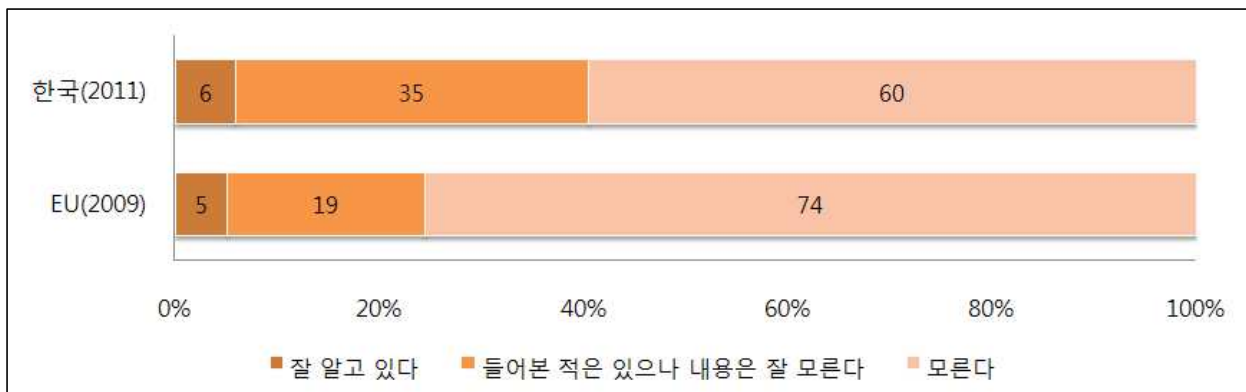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



주: 전체 응답자 Base.

- EU의 경우 2009년 실시된 인식조사의 결과 MDG에 대한 인지도가 74%에 달하나, 한국의 경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 (34.8%)는 응답비중이 높아 MDG 등 국제개발 관련 교육 및 정책홍보, 인지제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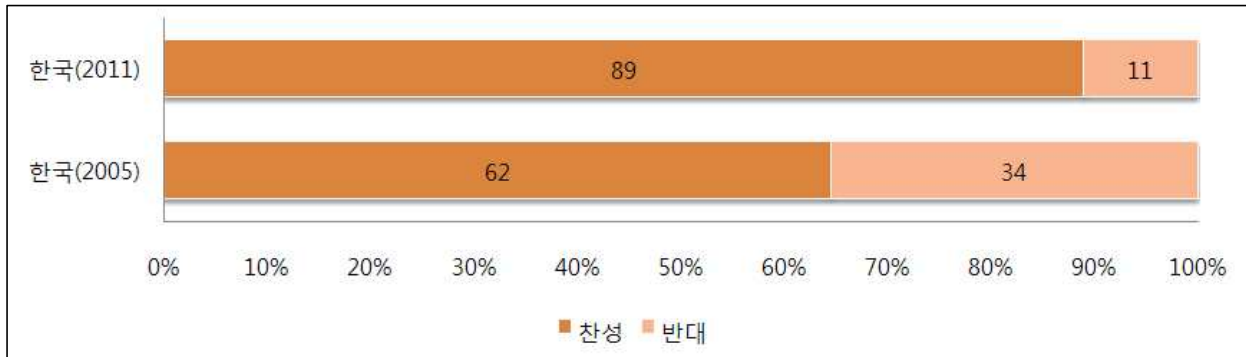
그림 3. 새천년개발목표(MDG)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비교



다. 개발협력의 정책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

- 우리 정부가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89%로, 2005년 실시한 설문에서 62.3%의 찬성의견을 보인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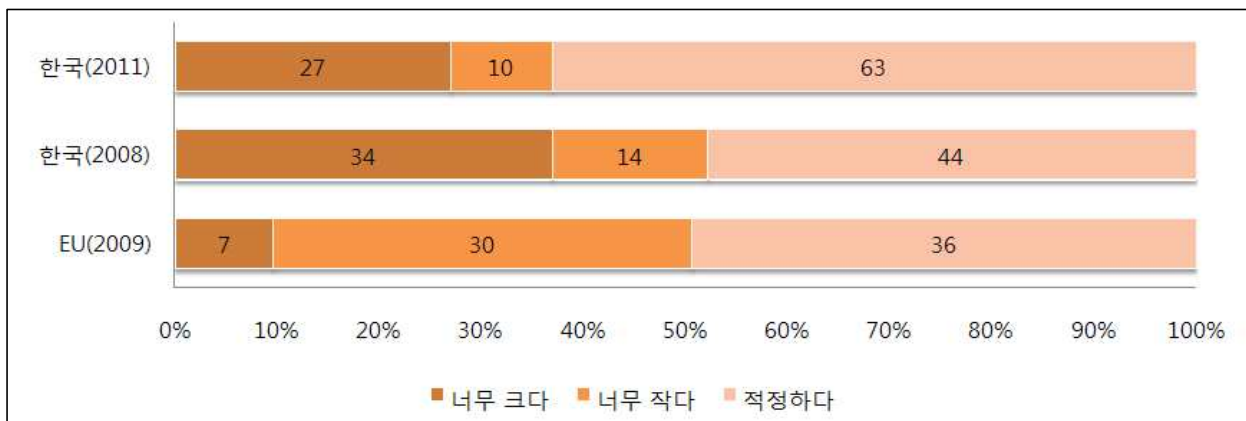
그림 4.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찬반의견



주: 2005년 국정홍보처 조사에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하지 않거나 '모름'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전체 합계가 100%가 아님.

- 대외원조 제공에 대한 인지도부와 무관하게 찬반 여부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령별 차이가 존재함.
- o 50~60대 응답자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도 원조혜택을 입었기 때문' (41.2%)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20~40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 기여' 나 '국제적 위상 제고' 같은 실리적 이유를 추구하는 등 다양한 답변 성향을 보임.
-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아직 원조를 제공할 만큼 부유하지 않기 때문'(71.7%)이라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이어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9.2%), '다른 나라의 문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8.2%), '원조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7.3%) 순으로 응답함.

그림 5. 대외원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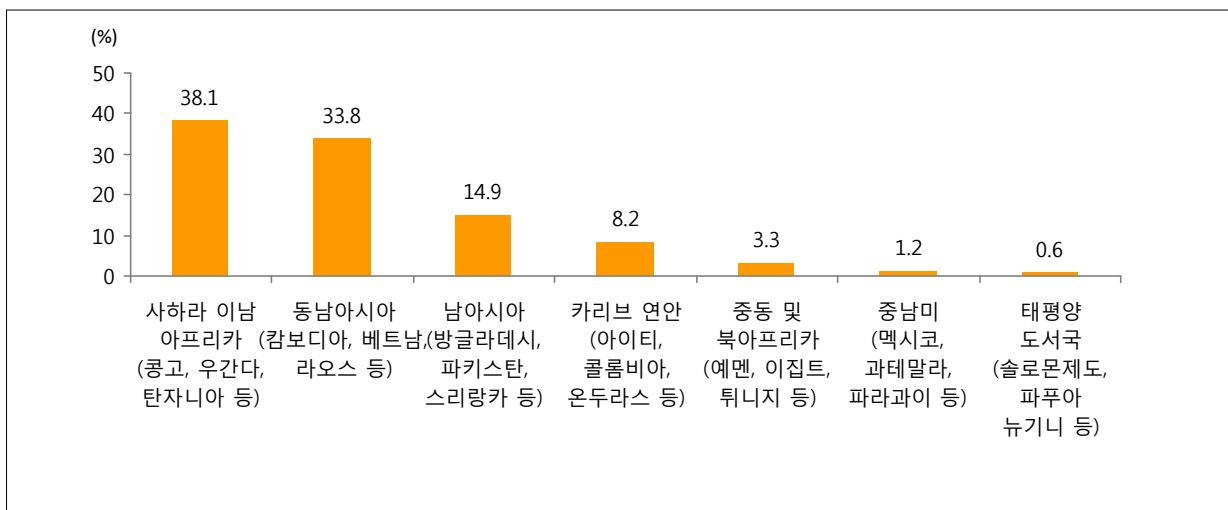
- 정부가 개발원조를 위해 지출하는 현재 예산규모(1인당 연간 약 2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3%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그 비중이 20%포인트 가량 상승하였고, 원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중은 7%포인트 감소함.
- EU(2009)의 경우 '적절하다'(36%)는 의견과 더불어 '너무 적다'(30%)는 의견이 비슷한 비중을 보임.
- 한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대외원조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9%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수준을

지키되, 그 이상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앞으로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정부가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지역으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38.1%), 동남아시아(33.8%)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우리 국민이 대외원조 제공이 필요한 지역으로 아프리카를 인식하는 정도는 EU(64%)보다는 낮으나 2005년 조사결과에서도 역시 아프리카 지역(44.5%)에 대한 응답비중이 가장 높아 아프리카의 빈곤과 기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6.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지역



주: 전체 응답자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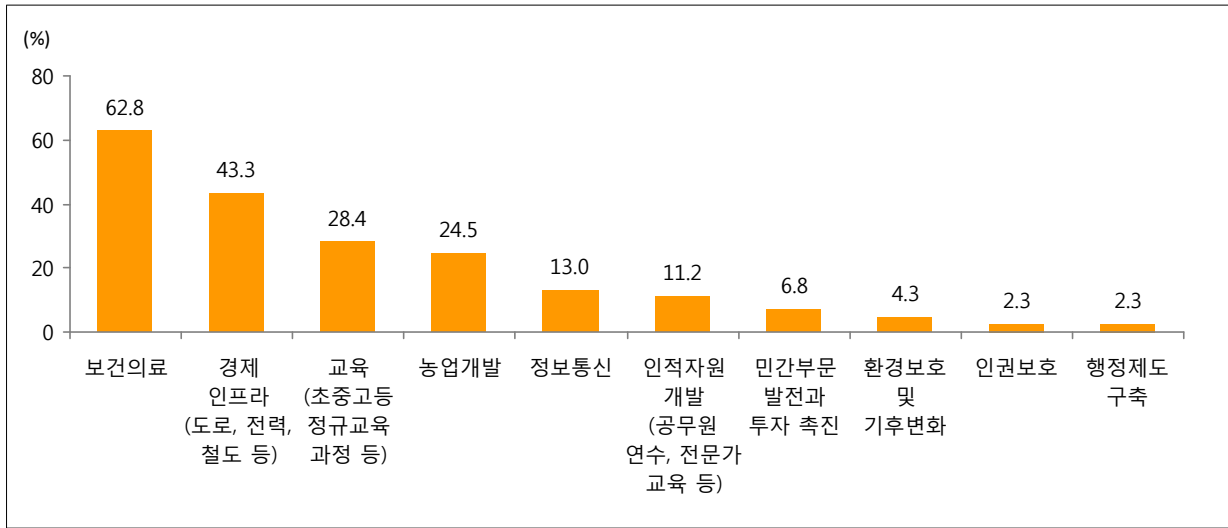
라. 개발원조의 기여도 및 효과

■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가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분야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꼽은 응답자가 43.1%로 가장 높으며, 이어 '국제적 긴급구호와 재난복구'(28.0%), '국력 제고 및 국제적 지위 향상'(13.2%), '개발도상국과의 외교적 우호관계 증진'(9.5%)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는 보건의료(62.8%), 경제인프라(43.3%), 교육(28.4%)이 제시됨(2개 복수응답).

그림 7. 한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주: 전체 응답자 Base, 2개 응답.

■ 원조제공 주체별로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큰 성과가 기대되는 국내기관으로 민간단체(NGO)를 꼽은 비율이 68.0%로 가장 높으며, 정부기관도 64.8%로 유사한 수준임.

- 국제기관 중에는 UN(92.7%)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32.7%)가 그 다음을 차지함.

o EU(2010)의 경우 UN(27%), 세계은행(19%), EU(17%) 등의 순으로 지지도가 높음.

■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조 관련 사업 중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원조활동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44.3%)’ 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연재해 지역의 긴급구호 활동(39.5%)’ 이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학생의 경우 ‘정부 원조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에 대한 응답이 33.8%로 다소 높음.

마. 개발원조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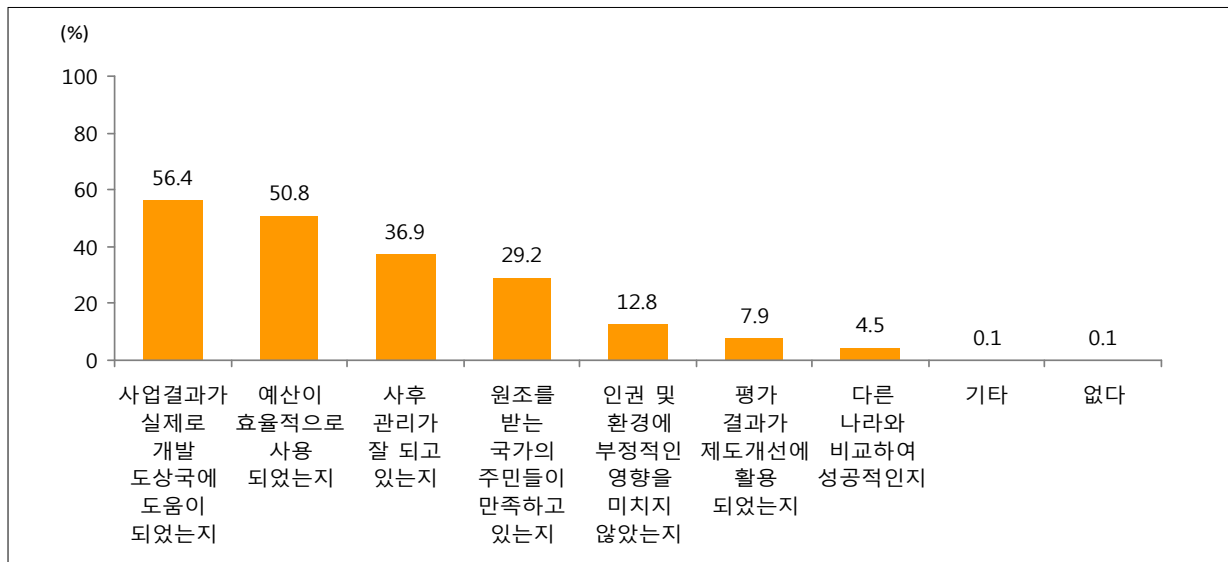
■ 정부의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가량(52.4%)이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다’ 는 응답이 높아 19~29세 응답자의 경우 58.7%, 직업별로는 학생이 58.5%로 가장 높음.

-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TV를 통한 정보획득 비율이 89.9%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신문(35.1%), 인터넷(28.6%)도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인터넷을 꼽은 비율이 높았으며, 19~29세 응답자의 경우 51.3%의 비율로 매우 높음.

- 원조사업과 관련한 정보 수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꼽은 응답자가 56.4%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50.8%), ‘사후관리’ (36.9%), ‘원조를 받는 국가 주민들의 만족정도’ (29.2%)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음(2개 복수응답).
- 2008년 실시된 유사한 조사결과 역시 ‘수원국 정부에 의해 원조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40.4%)와 ‘원조사업이 수원국의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33.4%)에 대한 응답이 높아 원조의 효과 및 효율성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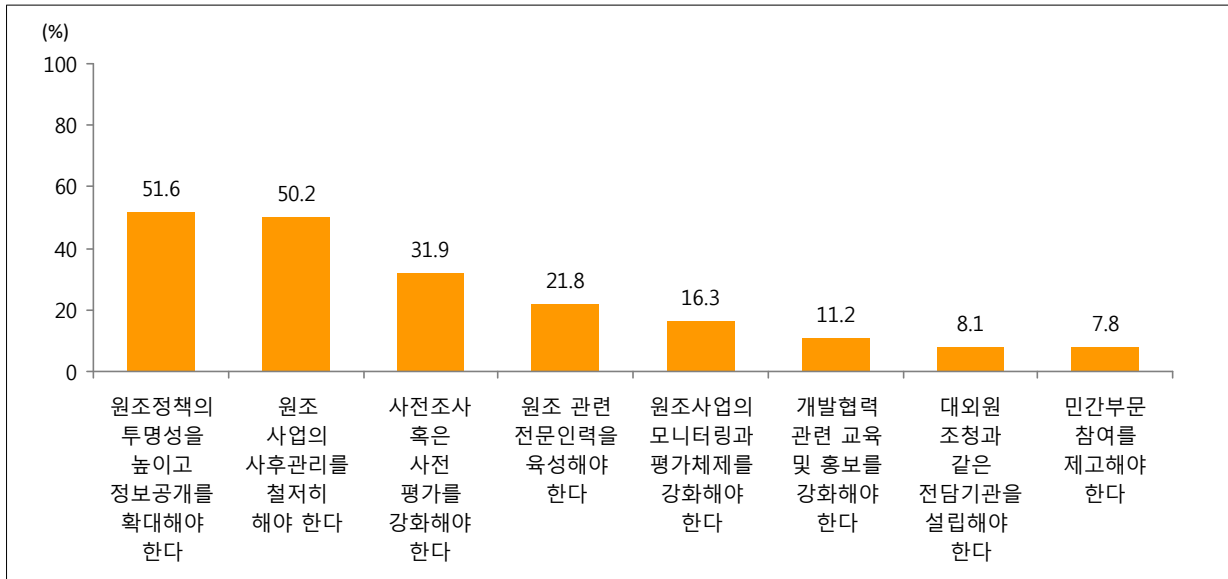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 Base, 2개 응답.

바. ODA 정책의 개선과제

-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원조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높았으며, ‘원조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 (50.2%), ‘사전조사 혹은 사전평가의 강화’ (31.9), ‘원조 관련 전문인력 양성’ (21.8%) 순으로 응답함.
- 이는 ‘대외원조 관련 관심 있는 정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정보는 사업결과가 실제로 개도국에 도움이 되었는지(56.4%), 원조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50.8%),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36.9%) 등이어서 향후 대외원조 정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9. 대외원조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주: 전체 응답자 Base, 2개 응답.

3. 정책적 시사점

■ 일반 국민의 ODA에 대한 기본 인식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고, 대외원조의 중요성과 실시 여부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당수 국민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가 공여하고 있는 대외원조에 찬성하는 의견이 89%에 달함.
- 그러나 젊은 층(19~29세) 응답자의 경우 대외원조 실시여부와 MDG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원조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9.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아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령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대외원조 관련 정보를 접하는 주요 채널로 인터넷을 꼽은 비율이 높았으며, 19~29세 응답자의 경우 그 비율이 51.3%로 매우 높아 향후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대외원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참여나 활동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실제 행동과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o 아일랜드는 ‘개발교육 전략 및 계획(Development Education Strategy Plan 2007~11)’을 수립하고, 2009년 기준으로 전체 ODA 예산 중 1.39%를 개발협력 인지제고를 위해 배분한 바 있음.

■ 대외원조에 대한 지지도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향후 대외원조 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지지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원조규모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외원조 제공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 한국의 현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 향후 대외원조 확대정책에 국내 경제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원조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UN과 민간부문(NGO)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원조공여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의 경우 UN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므로 다자원조 시 UN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적으로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부문(NGO)의 전문성을 활용한 원조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음.

o NGO의 활동 중에서 원조활동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자연재해 지역의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및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대외원조를 중점적으로 제공해야 할 지역으로 아프리카가 가장 높게 나타나, 그동안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던 원조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빈국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에는 세계 최빈국가 49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있고, 전 세계 절대빈곤층의 36%가 분포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이므로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아시아의 경우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최빈국에 대한 지원과 메콩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개발격차 완화사업에 대한 원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대외원조의 효과성과 기여도 향상을 위해서 한국의 대외원조 방식과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 향후 대외원조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당면과제로 '원조정책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원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ODA 정책 추진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설명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또한 주요 개선과제로 '원조사업의 사후관리', '사전조사 및 사전평가의 강화' 등이 지적되어 사업의 내실화와 성과관리가 중요하고, 원조의 효과와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향후에도 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인식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및 국제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ODA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년마다 ODA 국민인식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KIEP**